
현대일본에 있어서의 교육기회불평등과 평등을 위한 교육-사회정책

하시모토 켄지*

- 요약 -

이 연구는 일본에 있어서 교육불평등 문제의 실태를 밝히고 있으며, 교육불평등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에 기초해서 그 해결에 교육-사회정책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불평등이 각 계급간에 있어서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의 문제를 자본가 계급, 신중간계급, 노동자계급, 구중간계급이라고 하는 4계급 도식에 기초해 분석하고 있다. 각 계급별로 학력과 계급, 출신계급별, 코호트(COHORT)별 대학 진학률추이분석, 출신계급별, 중학3학년당시 성적별 고교진학률을 분석하고, 교육기회불평등의 심화를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불평등을 초래한 요인으로서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뿐만 아니라, 일본교육제도에 보이는 독특한 계층구조, 즉 고교간, 대학간 서열구조라고 하는 제도적 요인이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기회의 평등이 필요한 근거로서 직업달성 기회평등을 위해 교육기회평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아울러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교육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두 가지 점을 들어, 교육기회 실현의 평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 제안에는 교육비 부담능력이나 출신지역이 진학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하기위한 시책, 경제적 격차나 계급간 불평등을 경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 일본 무사시대학 사회학부, Tel: 03-5984-3715

이를 위해 교육정책을 넘어서, 세제, 노동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을 포함한 종합 정책이 필요로 함을 주장하고 있다.

주제어: 교육불평등, 교육기회, 계급

1. 계급화되고 있는 일본

최근 일본에서는 소득이나 수입의 격차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고, ‘격차사회’, ‘승자조 패자조’, ‘하류사회’ 등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 이것은 10년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1990년 중반까지의 일본은 평등한 사회였고, 일본인의 90%가 ‘중류’라고 하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97년의 일이다. 이 해부터 일본은 심각한 불황에 돌입하여, 기업의 경영파탄이나 도산이 속출하여 고용흡수력이 급격히 상실되었고 실업률이 급상승하였다. 동시에 사회불안도 심각화하여 중고년 남성의 자살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사회의 배경에 격차(불평등)의 확대가 있다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던 것이다.

격차확대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은, 다치마나키(橘木俊詔)의 『日本の經濟格差』(岩波書店、1998年)이라는 책과 사토우(佐藤俊樹)의 『不平等社會日本』(中央公論社、2000年)라는 두권의 책을 들 수 있다. 전자는 경제학자적인 소득분배론의 입장에서 소득통계의 분석과 국제비교를 행하여,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경제격차가 급속하게 확대되었다는 것, 그리고 격차의 크기는 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후자는 데이터의 분석방법에 약간 문제를 남기기는 했지만, 사회학적인 사회계층연구, 사회이동연구의 입장에서, 최근의 일본에서는 사회이동의 기회가 막혀가고 있으며, 상층계층의 아동이 아니면 상층계층에 소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격차의 확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급’이라는 것의 존재를 의식하게끔 하고 있다. 그것은 다양한 잡지에 ‘계급’이나 ‘계급사회’에 관한 기사가 빈번하게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반독자층을 위한 잡지기

사에 관한 일본 최대의 데이터베이스인 ‘大宅壯一文庫雜誌記事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계급’을 타이틀이나 키워드로 포함하고 있는 잡지기사(격투기나 경찰조직의 ‘계급’ 등을 다룬 기사를 제외함)는 1995년부터 1999년이 121건이었던 데에 반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194 건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1 년간에 64건에 달하고 있다

조사데이터의 분석으로부터도 일대일본에서는 계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급이라는 것은 1970년대 이후에 발전해 온 네오마르크스주의적 계급연구에 의해 정의된 계급이다. 근년의 계급연구는 마르크스의 계급개념을 계승하면서도 정치주의나 교조주의를 배제하고, 계량적인 실증연구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계급연구에서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양대 계급이라는 생각은 부정되고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중간에 위치하는 신중간계급과, 영세규모의 자영업을 행하는 구중간계급이라는 두 개의 중간계급을 포함하여 4개의 계급으로 나누거나 혹은 그것을 약간 변형시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4계급도식에 기초하여, 일본의 각계급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 <표 1>이다.(데이터는 SSM 조사, JGSS 조사, 취업구조기본조사에 의함)

<표 1> 4 개의 계급의 특징

	자본가계급	신중간계급	노동자계급	구중간계급
전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5.4%	19.5%	58.8%	16.3%
개인 수입	669 만엔	524 만엔	246 만엔	380 만엔
가계의 금융자산의 평균액	3,640만엔	1,350만엔	900 만엔	2,010 만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	41.1%	70.8%	29.5%	21.2%
[중] 이상의 계층의식	35.0%	13.1%	6.7%	11.3%
자민당 지지율	37.1%	23.2%	23.9%	42.6%
지방의원 중 아는 사람이 있는 사람의 비율	54.8%	26.6%	20.8%	47.2%
신문에서 정치 기사를 거의 매일 읽고 있음	62.9%	58.8%	36.3%	57.4%

자료 : SSM조사, JGSS조사, 취업구조기본조사

각계급 사이에는 큰 경제적 격차가 있고, 학력이나 ‘중간계급의식’, 정치의식

이나 정치참여의 상황에 크다란 격차가 있다. 개인소득의 격차에 관하여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자. 개인수입이 가장 큰 것은 자본가계급 다음으로 신중간계급으로, 노동자계급이 가장 적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소 적게 나타난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것은 본인의 회답에 의해 수입을 과약하고 있기 때문인데다가,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의 가족종사자(특히 여성)에서는 본인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극히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급간의 격차는 상당히 크고, 노동계급에 대한 비율은 자본가계급에서 2.7배, 신중간계급에서 2.1배가 되어 있다. 이 비율은 1995년에는 각각 2.4 배와 2.0 배였기 때문에 격차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계급 이외에도 수입의 격차를 만들어 내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경제격차를 확대시킨 주요원인이 계급간격차의 확대라고 한정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상관비라는 통계량을 사용하여 수입격차 전체에서 차지하는 계급간 격차의 비율을 보면, 1985년 16%, 1995년 18%, 2003년 20%로서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는 생략) 즉, 2003년의 일본에서는 연령, 성별, 학력, 지역, 그리고 개인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수입격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계급과 관련된 격차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학력의 상관비는 2%에 불과하고, 성별의 상관비는 24%이기 때문에 계급에 의한 격차는 학력에 의한 격차보다도 훨씬 크며, 성별에 의한 격차에 거의 필적하는 수준이 되어 있다.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격차확대는 계급간격차의 확대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현대의 일본은 계급사회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2. 계급소속과 교육기회의 불평등

그렇다면, 이러한 계급간 격차는 교육 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계급간격차와 교육과의 관계는 거의 두 개의 문제로 집약된다. 그것은 먼저, 교육받는 기간이나 종류에 의해 최종적인 소속계급이 달라지는 문제, 즉, 학력에 의해 계급소속이 결정된다고 하는 문제이며, 두번째의 문제는 출신계급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간과 종류가 달라지는 문제, 즉 출신계급에 의한 교

육기회의 격차라고 하는 문제이다.

우선 학력 등이 어느 정도까지 소속계급을 결정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표 2>는 학력과 소속계급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수십년간에 계급구성이 크게 변화하여, 구중간계급이 격감하면서 노동자계급과 신중간계급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계급구성은 연령층에 의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연령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령층을 35-44세로 한정하여 집계하였다. 학력은 4단계인데,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의 합계) 9년, '고졸정도'는 거기에다 고등학교 3년, '단기대졸 정도'는 거기에 단기대학 2-3년, '대졸정도'는 고졸 후 대학4년 이상에 걸쳐서 취학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의무교육과 고졸정도에서는 노동자계급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단기대졸업정도에서는 신중간계급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대졸정도에서는 신중간계급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다. 계급소속은 학력에 의해 상당히 달라지는데, 특히 피고용자인 신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비율이 학력에 의해 크게 달리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계급이나 구중간계급과 같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가업이 없는 자에게 있어서는, 학력이 계급소속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자본가계급비율은 학력에 의한 차이가 적고, 구중간계급 비율은 의무교육이 가장 높다. 이것은 가업을 상속함으로써 부모로부터 계급소속을 물려받는 사람이 많고, 이 경우 반드시 학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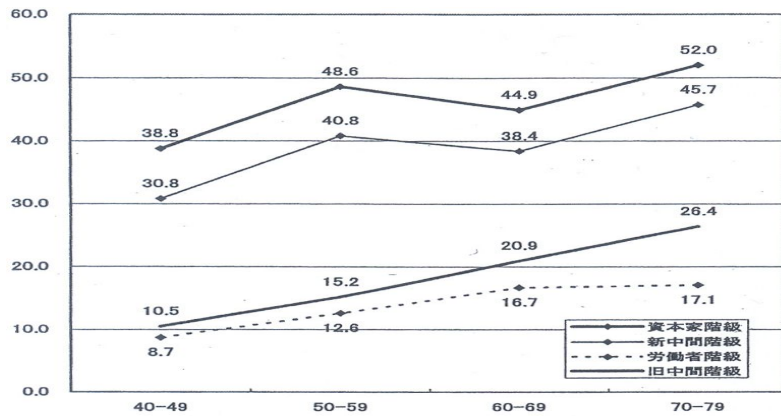
<표 2> 학력과 소속계급(2002년 35-44세)

	자본가계급	신중간계급	노동자계급	구중간계급	합 계
의무교육	4.8	2.9	74.5	17.8	100.0
고졸정도	3.7	13.1	72.5	10.7	100.0
단대졸정도	4.3	29.3	54.9	11.5	100.0
대졸정도	5.3	50.3	37.3	7.1	100.0

다음으로 <그림 1>은 JGSS 조사 데이터로부터 대학진학율의 추이를 출신계급별, 코호트별로 살펴본 것이다. 한 눈에 알 수 있듯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상당히 크며, 진학율에는 최대 30%에서 35%정도의 격차가 있다. 불평등의 정도를 시계열적으로 보면, 1950년대 출생 코호트에서 약간 벌어져서, 60년대 출생 코호트에서 약간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다면 거의 평행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대학진학율이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율의 격차는 축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1970년대 출생 코호트에서 노동자계급 출신자의 대학진학율이 늘어나지 않고, 다른 3개의 계급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은, 경제적 격차의 확대가 가져온 영향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그림1> 출신계급별 코호트별 대학 진학율의 추이



더욱이 SSM조사데이터를 사용하여, 출신계급별, 성적별로 고등교육진학율(대학과 단기대학의 합계)를 살펴본 것이 <표 3> 이다. 일본의 고등학교는 진학 실적이나 사회적 평가에 따라서 상하 구분이 엄격하게 서열화되어 있으며, 더구나 입학시에 학력에 의한 선발이 행해지기 때문에, 각각의 고등학교에는 서열속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거의 동등한 정도의 학력의 학생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성적은 고등학교 진학 한 해 전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 때의 것을 사용하였다.

<표 3> 출신계급별 중학교3년생 때의 성적별 고등교육진학율 (1960년 출생)

	중학3학년 때의 성적			
	상	중	하	전 체
자본가계급	75.0	58.8	42.9	62.5
신중단계급	87.2	57.1	44.4	70.4
노동자계급	53.8	10.9	2.9	18.9
구중단계급	40.0	22.6	20.0	26.9
전 체	66.4	32.3	17.3	40.6

한 눈에 알 수 있듯이, 진학율은 출신계급에 크게 좌우된다. 가장 높은 것은 신중단계급 출신자로서 70.4%, 자본가계급출신자는 62.5%로 신중단계급 출신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노동자계급 출신자의 진학율은 18.9%에 불과하며, 구 중단계급 역시 26.9%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앞서 본 계급소속의 결정요인으로서의 학력의 중요성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좋은 환경의 계급출신자가 높은 학력을 얻고, 스스로도 좋은 환경의 계급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으로, 학력을 매개로 한 계급적 위치의 세대적인 계승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적이 같은 수준이었던 사람끼리를 비교해 보아도, 계급차이는 매우 크다. 자본가계급, 신중단계급의 출신자는 성적이 상위라면 대부분이 진학하고 있고, 성적이 하위라도 40% 이상이 진학하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자계급 출신자를 보면 성적이 상위라도 진학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과반수로, 성적 하위인 경우는 거의 진학의 전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는 마찬가지로 SSM조사 데이터에서 본인의 교육연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행한 결과이다.

EDUCFAT는 부친의 교육연수, EDUCMOT는 모친의 교육연수, PERFORM은 중학3년 때의 성적, FCAP, FN MID, FOMID는 각각 부친이 자본가계급, 신중단계급, 구중단계급임을 나타내는 터미변수이다. 결정계수는 0.333으로 개인을 샘플로 한 데이터로서는 설명력이 상당히 높다. 결정계수에 대한 기여율은, 양친의 학력이 38.2%, 부친의 소속계급이 29.0%로서 출신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한 변수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진학이 가는

완가 아닌가는 본인의 성적 이상으로 부모의 학력이나 출신계급 등의 속성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진학율이 본인의 성적 이상으로 속성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기회의 불평등의 문제를 주로 학력의 격차문제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유력한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표 4> 교육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β	R	$\beta \times R$	contribution
EDUCFAT	0.200	0.449	0.090	27.0%
EDUCMOT	0.099	0.377	0.037	11.2%
PERFORM	0.272	0.402	0.109	32.8%
FCAP	0.093	0.129	0.012	3.6%
FNMID	0.235	0.375	0.088	26.5%
FOMID	0.048	-0.076	-0.004	-1.1%
R-squared	0.333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팍팍한 커리큘럼 하에서 장시간의 수업을 행하는 교육이 ‘주입식교육’으로 비판받았다. 이러한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하여, 지역이나 가정에서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되어 있고, 더우기 확실적인 교육을 받은 것에 의해 창조성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되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당시의 문부성은 ‘주입식교육’은 ‘넉넉한 교육’(ゆとり 教育)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커리큘럼의 작성기준인 실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교육내용의 양을 줄이고,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수도 줄였다. 그러나 1990년대말이 되자 ‘넉넉한 교육’에 의해 학력이 저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비판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개의 논점이 있다. 하나는 학력저하에 의해 일본의 국력이 저하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학력이 저하한 것은 삭감된 교육내용을 커버하기 위하여 자비로 학원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고, 수업료는 고액이지만 학습지도요령에 의한 제약을 덜 받는 사립학교에 다니기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아동이며, 결과적으로 사회계층간의 학력격차가 확대되어,

교육기회의 평등이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넉넉한 교육'이 교육기회의 구조에 미친 영향이란 아마도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진학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학력보다는 속성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인 만큼 학력문제가 주목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며, 주입식교육과 넉넉한 교육 그 어느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검토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격차 확대나, 앞서 살펴본 교육기회 불평등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논한다고 한다면, 교육내용보다는 불평등을 가져오는 구조 그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

그렇다면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왜 발생하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그리고 제도적 요인이다.

먼저 제도적 요인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하다.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금액의 비용이 든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학생생활조사'에 의하면 학생 1인당 학비와 생활비는 연간 194만엔, 하숙이나 아파트 생활의 경우는 227만엔이다. 가족으로부터의 원조나 경제적 도움의 금액은 각각 145만엔과 179만엔에 이른다. 거꾸로 고졸로 취직하게 되면 정규고용의 경우 240만엔 정도, 비정규직이라도 100만엔 정도의 연간소득이 기대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소득층의 부모와 그 아이가 학력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진학하지 않는 길을 선택한다고 해도 불가사리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코스기(小杉礼子)의 조사에 의하면, 졸업 후에 '프리타'(젊은 나이의 비정규고용노동자)가 될 예정인 고교생의 41.4% 정도가 그러한 진로를 선택한 이유가 '진학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을 들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력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젊은이가 진학의 길을 포기하고 저임금의 비정규고용노동자가 된다고 하는 왜곡된 구조를 엿볼 수 있다.(小杉礼子, 『フリーターという生き方』 勁草書房, 2003)

두 번째로는 문화적 요인이다. 고학력자가 많은 상층의 부모들은 풍부한 학

교경험을 가지고 노력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나 진학하는 것의 가치와 그를 위한 노하우를 알고 있다. 부모들의 이러한 다양한 지식을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전해져서 아동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피에르 부르디ュー는 이러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문화자본’이라고 부르고 있다. 말하자면, 부모로부터 아이에게의 문화자본의 전달이 상층출신의 아이들에게 유리함을 주고 거꾸로 문화자본의 결여가 하층출신의 젊은이에게는 불리함을 주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일본의 교육에서 보여지는 독특한 계층적 구조, 즉 고등학교간 그리고 대학간 서열의 구조라고 하는 제도적 요인이 격차를 넓히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고등학교간에 진학교에서 ‘저변학교’까지에 이르는 일원적인 서열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좋은 환경의 가정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문화자본의 도움을 빌어서 학교교육의 이른 단계에서부터 스타트닷슈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진학교에 진학하지만 그렇지 못한 젊은이들의 많은 부분은 비진학교나 저변학교에 진학한다. 그런데, 그 각각의 고등학교는 커리큘럼이나 지도방침, 주변으로부터의 사회적 기대에 있어서 많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진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대학진학이 용이하게 되고, 저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진학은 어려워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양자의 진학율의 차이는 확대되고 고정화되게 되는 것이다.

대학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국립대학은 원래 저렴한 학비로 폭넓은 계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대학이지만, 현재까지 구제국대학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신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학력이 높은 젊은이 이외에는 입학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립대학은 대도시부에 집중해 있기도 한데다 학비가 비싸다. 현재로서는 대학정원에 상당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비와 생활비만 부담할 수 있다면 성적이 평균 이하라도 사립대학에의 진학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는 진학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대학수가 적은 지방에서 특히 심각하다.

4. 평등을 위한 종합정책

교육기회의 평등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육을 받는

것이 직업적인 달성(이 중에는 희망하는 계급에 소속한다고 하는 것도 포함된다)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직업달성의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불가결한 조건으로서 교육기회는 평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기회의 평등은 효율원칙에도 맞는 일이다. 왜냐하면 교육기회가 불평등하다는 것은 좋지 않은 환경 계층의 출신자의 재능이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제2의 이유는 보다 원리적인 것이다. 교육은 폴즈가 말하는 사회적 기본재이며, 또한 센이 말하는 잠재능력의 기초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교육기회의 평등은 그 자체가 달성되어야 할 가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서 나는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첫째 진학에의 장벽을 없애기 위한 시책, 그리고 둘째 경제적인 격차나 계급적인 불평등 그 자체를 경감하기 위한 사회정책이다.

우선, 교육비의 부담능력이나 출신지역이 진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학비는 당분간 국립대학정도의 수준(연간 약54만엔, 사립대학의 평균은 114만엔)으로 묶어두는 것으로 하고 사학에의 지원을 충실하게 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감면이나 장학제도를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고등교육 전체 중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4년제대학의 73.5%, 단기대학의 93.8%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거액의 재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새로운 재원으로서 대졸자를 고용하는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세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 특히 대기업은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고 많은 대졸자를 고용하여 고등교육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어 왔다.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흡수하여 고등교육비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 방책에는 기업이 대졸자를 보는 눈이 까다롭게 되어 무의미한 학력편중이 해소된다고 하는 바람직한 효과도 기대된다. 동시에 교육기회의 격차를 확대하는 한 요인인 고등학교간의 서열구조는 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최종적으로는 고등학교 입시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발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우선 그 시작은 직업고등학교나 비진학교로부터 대학진학을 원조하는 시책이 요구된다. 또한 많은 사립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또한 시설이나 설비면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국립대학은 지역의 젊은이를 보다 많이 폭넓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격차나 계급간의 불평등을 경감하는 것이 요구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시책은 당면의 시책으로서도 유효하겠지만,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구조 그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의 '결과의 평등'이 불가결하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다진 하이에크는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정부는 모든 사람의 물리적 인간적 환경전체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일정 정도의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요구를 강하게 경계하고 있었다(하이에크, '법과 입법과 자유'). 그러나 하이에크의 시대와는 달리 '기회의 평등'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경제적 격차라고 하는 '결과의 불평등'의 확대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가져오고, 나아가 빈곤층이나 젊은 비정규고용노동자층의 증가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 오늘날,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좁은 의미에서의 교육정책에 머물지 않는 종합적인 정책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격차가 축소되면, 능력이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게 되어 사회의 활력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견해도 유력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원래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격차가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일찌기 종신고용과 연공제가 지배적이었던 일본의 대기업에서는 남성정사원의 생애임금의 격차는 별로 크지 않았지만, 승급액이나 승진, 승격의 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높은 생산성을 실현하고 있었다.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타자와 비교하여 보다 우위에 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그 격차가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점은 세계경제포럼의 '경제경쟁력보고'에서 경제격차가 적은 북구제국이 경쟁력의 상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실증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외는 경쟁력 제2위에 랭크되어 있는 미국인데, 그 경쟁력은 전

노동장관이었던 라이슈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극단적인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층의 사람들은 장시간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하고, 상층의 사람들은 여기에 수반된 방기소득이 크게 된 결과, 전체로서의 노동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이슈, 『勝者の代償』, 東洋經濟新報社, 2002年). 이것은 우리들이 이상으로 삼을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이러한 두 가지가 나타내는 것처럼, 교육기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정책목표는 종래의 교육정책의 수비범위를 크게 초월한 것으로, 세제, 노동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을 포함한 종합정책을 필요로 한다.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격차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정책의 일부로서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橋本健二. 2003. 『階級・ジェンダー・再生産』東信堂.
- 橋本健二. 2006. 『階級社会——現代日本の格差を問う』. 講談社.
- 小杉礼子. 2003. 『フリーターという生き方』勁草書房.
- 佐藤俊樹. 2000. 『不平等社会日本』. 中央公論社.
- 橋木俊詔. 1998. 『日本の経済格差』. 岩波書店.
- Reich, Robert. 2002. *The Future of Success: Working and Living in the New Economy*. New York: Vintage Books.
- Sen, Amartya. 1985. *Commodities and Capabilities*. Elsevier Science Publishers.
- Bourdieu, Pierre. 1970. *La Reproduction*. Edition de Minuit.
- Hayek, Friedrich August. 1973. *Law, Legislation and Liberty: A New Statement of the Liberal Principles of Justice and Political Economy*. Routledge & Kegan Paul.

K C I

現代日本における教育機会の不平等と平等のための教育-社会政策

橋本健二*

この研究は、日本における教育不平等問題の実態を明らかにし、それは社会の構造的問題であるという認識に基づいて、その解決には教育-社会政策が必要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

教育不平等が各階級間においてどのように拡大されているのかについては、資本家階級、新中間階級、労働者階級、旧中間階級という4階級図式に基づいて分析している。それぞれの階級別に、学歴と階級、出身階級別・コホート別大学進学率の推移の分析、出身階級別・中学3年生時の成績別高等教育進学率を分析し、教育機会の不平等の深化を証明している。そのような不平等をもたらす要因としては、経済的要因、文化的要因だけでなく、日本の教育制度にみられる独特の階層的構造、つまり、高校間・大学間の序列の構造という制度的要因が、格差を拡大していることを指摘している。

教育機会の平等が必要とされる理由については、職業達成の機会の平等を実現するための不可欠の条件として教育機会の平等が必要であること、社会的公共財としての教育がすべての人々に保障される必要があるという2つの点を挙げ、教育機会の平等を実現するために求められるものを提案している。

その提案には、教育費の負担能力や出身地域が進学に影響し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経済的格差や階級間の不平等そのものを軽減することが含まれているが、そのためには、教育政策を超えて、税制、労働政策、社会保障政策などを含めた総合政策を必要である。

主題語: 教育不平等, 教育機会, 階級

* Musashi University

<Abstract>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the Educational-Social Policy for Equality in Modern-Day Japan

Hasimoto, Kenji*

This study clarifies the reality of the educational inequality problem in Japan, and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educational inequality problem is a social structural problem, we have the purpose in proving that there is a need for an educational-social policy in solving it.

We have analyzed the problem of how educational inequality is increasing between each class, based on the 4-class scheme, which includes the capitalist class, the new middle-class, the laborer class, and the old middle-class.

For each class, we have carried out a regression analysis of the ratio of students admitted to universities for each academic background, class, native class, COHORT, and have analyzed the ratio of students admitted to high schools for each native class and for each grade during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and have proved the depth of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y. We have pointed out that as factors causing this kind of inequality, not only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but also a unique class structure appearing in the Japanese education system, in other words, the institutional factor known as the rank structure between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is increasing the gap.

We are proposing equality in the attainment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by stating two points, that an equality in educational

* Musashi University

opportunities is needed for the equality in the chances of attaining a job, along with the point that there is a need for education to be guaranteed to a majority of people as a social public property, as the basis for the need of 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That proposal includes a policy to make sure that the ability to pay educational expenses and one's hometown does not influence one in continuing studies at a higher level, and the reduction of economic differences or inequality between classes, and is asserting that an all-around policy, which includes not just the educational policy but also such things as the tax system, the labor policy, and the social security policy, is needed for this.

Key words: educational inequality, educational opportunity, class

K C I